

익산시 '촘촘한' 방역체계

13개 사업 총 23억7000만원 들여 시민 안전망 더욱 확충 저소득층 마스크·감염병 취약지역 소독용품 추가 보급

익산시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촘촘한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2일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강화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 방역체계 구축에만 13개 사업에 23억7천만원을 투입한다.

우선 감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3억4천만원을 투입해 마스크 보급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모두 2만15천명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달까지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에 1인당 2매씩 총 26만여장의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했고 그 중 관내 322개 제조업체와 농촌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 1만2천부를 배부하여 사각 지대를 해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익산시 내 공적 마스크는 3월말 기준 약 84만장을 보급 관내 지역사회 마스크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을 위한 생활비도 지원된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격리·입원치료를 받은 시민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시민에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

14일 이상 격리 시 1개월의 생활비가 지급되며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또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감염병 예방 취약지역에 방역용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시는 집단거주시설 등 2,664곳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했으며 손소독제 7,500여개와 환경소독제 1만1천여개, 소독장비 등을 배부하고 포스터와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다중방문사업장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미국종합처리장 등 8곳에 대한 방역용품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전 분야로 방역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방역 담당 인력을 추가 채용해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전역에 걸쳐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약 6억4천만원을 투입해 음압특수구급차와 음압텐트 등의 장비를 추가로 확보한다. 해당 장비는 감염병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서 이용이 가능해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초기에 선별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중국인 유학생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비롯해 지역 작은도서관 40여곳에 책소독기 지원, 약국과 편의점, 마트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방역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내고 일상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촘촘한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지역업체 피해 심각해져"

익산상의, 지역업체 200여곳 조사... 응답업체 62% "영향 커"

코로나 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익산지역 기업체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양희준)가 지난 2월에 이어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지역기업 2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코로나 19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크다고 응답한 업체는 응답업체의 62%(응답 52개중 32개사) 달했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피해 및 애로사항으로는 전세계 팬더믹 진행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차질, 수출입 물류 붕괴로 인한 물품 배송 애로와 비용증가,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주문감소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애로해결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마스크와 방역용품 지원, 고용유지에 따른 세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상의에서는 개별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

공회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 지역 금융권 등과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익산상공회의소에서는 소독약품 구입에 애로가 있는 회원업체들을 위해 관련 약품을 구매하여 업체에 전달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 구입에 애로가 있는 업체를 위해 저렴한 단가의 마스크를 구매토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상공회의소 양희준 회장은 코로나 19 관련 애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관련 애로를 수시로 접수하고 자금조달 등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개인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해외입국자 40명 검사... 전원 '음성'

3월말 기준, 자가격리 중

익산시는 정부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조치와 관련, 보다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별도의 생활시설을 마련해 입국자 관리중으로 지난 3월말 기준 40명이 검사하여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며 해외입국자 전원에게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에 입소시켜 동선을 최소화해 한층 철저히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자로 공항 검역을 통과한 사람은 KTX 또는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임시하차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도착

후 소방본부 차량으로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즉시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 후 보건소 구급차량으로 임시생활시설로 다시 이동하여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격리되며, 양성판정 시 국가 지정병원으로 이송 치료하고 음성판정시 귀가조치하여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한다.

자가격리대상자는 자가격리자안전진단 앱을 설치, 매일 2회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시는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14일간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그러나 4월부터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은 물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게 됨을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경영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긴급 확대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생산과 판매,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3월 말 기준 관내사회적기업은 18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은 23개소이다.

그 중 21개 기업이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근로자는 총 101명이다.

재정지원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장

려하기 위해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30% ~ 70% 까지 지원된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사회적기업들을 위해, 월 지원금 선지급 및 20% 추가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당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휴업으로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의 70%까지 지원해 기업의 경영 악화를 해소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산불방지 총력

군산시는 청명·한식을 앞둔 주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청명·한식을 전후한 시기에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전문 진화대원 55명, 산불감시원 49명, 시 공무원 225명 등 총 329명을 산불 위험지역과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산림복지과를 중심으로 23개 읍면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림복지과 직원 1/3, 읍면동 직원 1/4로 증원해 아침 9시부터 일몰시까지 특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봄철 건조시기가 지속되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말 전직원 1/6을 각 읍면동 산림에 배치해 소각 행위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심문대 산림복지과장은 "산불 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산불진화 및 실화자 검거 등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수산직불금 지급

군산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액이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7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9개 섬 지역(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가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이달 29일까지 수산직불금 지급신청서와 수산물 판매·조업 실적 증빙서류 등을 갖춰 어촌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육도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올 1월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 적용

군산시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 420개소) 임대료 8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지난 3월 31일 공포했으며 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대 1%까지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 인하하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6개월간) 1단계로 공유재산 기준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

해 즉시 임대료를 감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 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7억 4천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어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 6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